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왜 늦추나”

인권위 국감...민주당 공격에 한국당 “정부, 北 인권문제 외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북한 인권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이 짓밟힌 일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위가 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이날 중국 유경식

당 소속 북한 여중업원들의 집단 탈북 기획 의혹과 관련 “상당시간 (조사) 시간을 끌었지만, 결론이 안 났다”며 “이는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권위가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통일부의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168억원 정도에서 내년엔 53억원이나 깎였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북한 여중업원 집단 탈북 기획 의혹에 관한 문제는) 직권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관련인 조사가 쉽지 않았다. 자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북한인권 관련) 성명을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노력한 적이 없다”고 장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운영위 국감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대체복무 기준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대체복무 기간) 현역의 1.5배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관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갑질 동영상은 계기로 사기업 내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는 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인권위가 사적 기관을 조사할 수 없지만, 실태를 조사해 관련 부처에 (개선 사항을) 권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이 취임한 지 2개월 됐는데, 자기 아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인사발에서 “인권위는 협조와 차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인권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군 인권 보호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당 결단 있어야”

정개특위 회의...심상정 위원장 양당 동시 비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기본적인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 등을 확인했다.

우선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선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 여론을 인식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간 괴리를 최소화시킬 선거제도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의 300석을 고집시켰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일부에선 전체 국회예산을 동결하고 의원 숫자를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회 전체의석을 늘리기 위해선 지역구에서 일부를 줄이고 그만큼 양해를 구해 (비례)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영수 사무총장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재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례성만큼이나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제 지역구가 영주문경에선 인데 서울의 3.7배”라며 “그런데 서울에 국회의원은 49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민일반의 목소리에 대한 의회의 국민대표성이 굉장히 낮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면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간 조절이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선 법정시한을 한참 넘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건을 의결한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 시한인 10월15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의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동시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50% 지원 검토” 여야 ‘공무원 증원’ 충돌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

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은 30% 수준이었다”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조성할 때 용지가 정해지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남 최고위원은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 증원이므로 단순히 비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폈으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양당은 정부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계획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그중 7만명은 자연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들은 주로 소방·경찰·복지 등 그동안 수요가 있는데 (인력) 부족했던 분야”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과다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데 증원된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연금도 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계속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예컨대 경찰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치안만 신경 써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고노 외상, 日 강제징용 배상 앞장 서달라”

천정배 의원 공개 서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7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을 향해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 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방안’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제출했다.

이 서한은 곧바로 외교부로 보내진 뒤 일본 외무성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 의원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국회 의통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둘러싼 귀국 정부의 언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고 글머리를 열었다.

천 의원은 서한에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일로 월암리, 전원주택부지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 최고(40채 가능)
 - ✓ 남약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남약신도시 방향 4차선 도로 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30억(일시불)
- 문의. 010-6834-7400

